

시론

광주·전남엔 행정통합 추동할 리더 없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

광주와 전남엔 행정통합을 추동할 리더가 없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그런 일을 추진할 내공과 정치적 책략이 없다. 아니면 시민과 많은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실력이 없다. 그것도 아니면 광주직할시 재선 시장과 전남특별자치도 삼선 지사에 자족하려는 소심(小心) 때문인가.

요즘 대구와 경북에선 '대구경북특별시' 설명회가 한창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다. 설명회에선 대구와 경북 통합 필요성과 추진 경과, 합의문 주요 내용, 대구경북통합특별법과 향후 계획, 통합 기대효과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대구경북특별시는 대구와 경북 통합 명칭이다. 지난달 21일 대구시장, 경북지사,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가 서명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명기돼 있다. 합의문엔 대구와 경북의 통합 추진 노력과 함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할 입법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약속도 담았다. 또한 7가지 합의사항도 명기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합의사항이 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대등한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통 큰 발상이다. 만약 특별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6년 7월 출범이 가능하다.

부산과 경남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 위원회는 부산과 경남 통합을 주도할 핵심 조직이다. 내년엔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시민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권고안'을 만들어 부산시와 경남도에 제출하는 일을 한다.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정부와 통합을 협의할 '범정부 통합 추진단'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과 경남 통합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로 명명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을 위해 노력했지만 좌초됐다. 2022년 9월 박정호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통합 논의를 재추진했다. 울산은 빼고 부산과 경남만 통합하는 내용이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은 이런 움직임의 후속 작품이다.

왜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동할까. 이른바 '뭍집 키우기' 전략이다. 인구수와 면적이 커지는 거대 지역(mega-region)이 된다고 성장과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나. 물론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 규모경제가 일어나고 수확배증 법칙이 발생해 재화와 서비스의 집중도가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670만 명의 부산 중심 거대 지역, 500만 명의 대구 중심 거대 지역은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라고 압박하고 요구할 수도 있다.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와 수도권 중심의 공간 구조에서 시도해 볼 만한 현실적 대안이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

동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왜 광주·전남에선 행정통합 움직임이 없을까. 이유는 많지만 행정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정치적 지도자의 부재다. 일차적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이를 추동해야 하는데, 식견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큰 판을 벌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니 조용히 연임 준비'를 하겠다는 소아적 태도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 또한 대동소이하다.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시·도민을 설득할 역량과 내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흥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존재가 돋보이는 이유다.

둘째 전문가와 여론 주도자의 무관심이다.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지역사회를 향해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교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들이 조용하다. 셋째 지역 언론의 방관적 태도다. 지역 언론은 지역 내 아젠다를 제시하고 여론을 모아 야 한다. 하지만 그 역할에 소홀하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논치를 봐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행정통합은 세계적 추세다. 최근 들어 고속도로 시대에서 아닌 초고속 철도와 GTX 시대이니 그렇다. 행정통합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 대안으로 메가시티, 메가시티리전, 초광역경제권 등을 들먹인다. 때문에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의 정치적 지도자는 대단한 식견과 리더십 소유자다. 설명 행정통합이 좌초된다고 해도, 이를 추동한 리더십만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광주·전남엔 행정통합을 추동할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정녕 없다.

社說

민생 안정에 역점뒤야 할 광주·전남 내년도 예산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7조6천99억원으로 올해보다 10.2%(7천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남도는 12조 5천436억원으로 2.4%(2천974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적극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민생 회복·미래 투자, 돌봄 확대, 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자금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뒀다.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의 경우 출생기반수당,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임신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처했다. 당국이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금융권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며 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더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 줄폐업에 대한 공포 속에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지역 경제의 뿌리가 무너지면 견잡을 수 없다. 비상한 인식으로 금융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가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잡은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역대급으로 어려운 한파가 닥치고 있다.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처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투입돼야 한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뜻한 공도체를 조성하고 기후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AI)·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등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민관합업 과제도 따르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 숙고해야 할 것이다.

보행자 사망사고 느는 계절, 배려의 교통문화 절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88명이었으며, 월별로 보면 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4분기가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분기 26.1%였다.

11월11일은 '보행자의 날'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고령자의 무단횡단 경각심 고취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과 목표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관·단체는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문화 홍보, 교통안전물품(지팡이·물티슈) 제공, 무단횡단 금지 및 서약 등을 진행했다. 보행자의 날은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지정됐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10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대기오염, 탄소배출, 에너지 고갈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개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목표도 뚜렷하다.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는 계절이다. 날씨가 선선하고 축제와 행사,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잦아진 시기다. 해가 짧아지는 계절적 특성도 있지만 날이 추워지면서 두꺼운 옷 착용함에 따라 행동이 느려지는 측면도 있다. 고령자와 어린이 등 약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어두운 색깔은 피하고 가급적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고령자의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벌거 아니라고 무단횡단을 대수롭게 여겨선 안 된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데다가 사고에 따른 과실 책임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다행스럽게 매년 감소세를 보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 정도가 보행자라고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행자는 도로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서로 손을 들어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다. 상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청연안방병원장

얼굴이 뜨겁고 이유없이 화난다면 '갱년기 증후군' 의심

등을 보인다. 만성 증상은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다.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은 3-5년 정도 지속되며,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갱년기 증후군은 신체적 증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편감,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가진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폐경 전 여성에 비해 31-55% 높아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치료관리가 중요하다.

양방치료에서 우선적인 방법은 호르몬 보충요법이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의 호르몬을 직접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폐경 증상을 개선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질 출혈, 정맥 혈전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갱년기 증후군을 '부인허(婦人虛勞)'라고 해 여성의 노화로 인해 장부와 기혈이 손상되어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성 갱년기 증후군에는 침치료, 한약치료를 활용한다.

침치료는 기혈 순환을 조절해 안면홍조, 손발열감 같은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켜주며,

수면장애나 우울감 같은 신경정신적 불편감에도 효과가 좋다. 손목 안쪽 주름의 정중앙에서 새끼손가락쪽으로 움푹 패인 곳에 위치한 신문(神門)혈, 양쪽 귀의 최상단에서 선을 이어 정수리에서 만나는 곳에 위치한 백회(百會)혈 등이 주로 활용된다.

한약치료에는 칩의 뿌리인 갈근(葛根)에 함유된 이소플라본(isoflavone)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갱년기 대사질환 개선 효능이 있다. 또한 인삼(人蔘), 육종용(肉蓯蓉), 작약(芍藥)은 여성호르몬을 강화하고 성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해준다.

갱년기 증후군 환자의 생활관리로는 적절한 운동과 가족구성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운동을 하면 근력이 향상되고 수면장애가 개선된다. 또한 일조량이 늘어나면 우울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가족구성원들은 갱년기 증후군 환자의 우울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증상을 예민한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지를 하며, 환자의 치료를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갱년기 증상을 단순 노화로 여기지 말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란다.

등을 보인다. 만성 증상은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다.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은 3-5년 정도 지속되며,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갱년기 증후군은 신체적 증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편감,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가진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폐경 전 여성에 비해 31-55% 높아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치료관리가 중요하다.

양방치료에서 우선적인 방법은 호르몬 보충요법이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의 호르몬을 직접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폐경 증상을 개선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질 출혈, 정맥 혈전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갱년기 증후군을 '부인허(婦人虛勞)'라고 해 여성의 노화로 인해 장부와 기혈이 손상되어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성 갱년기 증후군에는 침치료, 한약치료를 활용한다.

침치료는 기혈 순환을 조절해 안면홍조, 손발열감 같은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켜주며,

독자투고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사전예방 최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은 난방기구와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다른 계절보다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해마다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의 주요 화재 원인은 관리 부주의에 있다. 연통 과열이나 불티가 날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몇 가지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온도 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

에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투입하면 과열로 인해 주변의 가연물에 불이 붙기 쉽다.

둘째, 연료 투입구나 굴뚝 끝에서 불티가 날려 주변의 빨나무나 지붕 등 가연물에 화재 발생할 수 있으며, 타고 남은 재가 바람에 날리면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

셋째, 연소 중 생기는 재와 잔액(타르)이 연통에 쌓여 생선된 퇴적물이 솟아들려 작동돼 연통의 온도를 300℃ 이상 과열시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위험이 있다.

넷째, 보일러의 전기 배선 합선이나 기계적 고장도 화재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화목보일러는 반드시 설치 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보일러와 가연물은 최소 2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보일러실 근처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두어야 하며,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지 않아야 한다. 젓은 나무를 사용할 경우 3-4일에 한 번은 투입구 안을 청소하고, 연통 청소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화목보일러를 처음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방비 부담도 줄일 수 있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정호·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그래픽 뉴스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생후 2개월 미만 영아... "임신부 접종해야"

올해 들어 백일해 환자가 폭증한 가운데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와 가족, 돌보미 등도 적극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은 영아가 지난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국내 백일해 환자는 영유아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1년 백일해 사망자 수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백일해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해 백일해 환자는 292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11월 첫째 주까지는 누적 3만332명으로, 100배가 넘는 환자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1만3천866명으로 전체의 45.7%, 7-12세가 1만2천725명으로 42.0%를 차지하는 등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다.

0-6세의 경우 전체 환자의 3.3%(1천8명)로, 8월 이후 환자가 늘고 있다.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에는 주당 2-4명에서 10월 말 12명까지 늘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올해 백일해 유행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선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1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편집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실용규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9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